



CEO Brief

2022.03. 제2022-4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요약

2022년 5월로 예정된 새 정부의 출범은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에 대한 이슈 제기를 지속해야 할 것임. 한편,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에 대응하여 디지털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함

- 2022년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며, 복지는 촘촘하고 두툼하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축소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집을 기초로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봄
- (노후소득 공약)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의 공약이 제시됨
 -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설치를 통해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수급부담 균형,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연금개혁을 추진함
 -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65세 이상 고령층 중 하위소득 70%에 대해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함
 - 한편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고, 연금개혁을 위해 전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안도 검토될 수 있음
- (노후소득과 보험산업)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



CEO Brief

-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으나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적립 만기 이후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 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보다는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장 공약)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세대·대상별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확대에 요약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산업 육성 및 전염병 대응 강화를 목표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신설,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주도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산간 지역 원격의료 사업 확대 등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및 건강사각지대 헬스케어 확대가 제시됨
 - 세대별, 대상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복지 지원 확대를 목표로 영유아의 정서·발달장애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노인 대상 간병비 지원과 지역돌봄 확대, 환자 대상 고가 항암제·중증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과 재활로봇 활용 확대,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이 제시됨
- (건강보장과 보험산업)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민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개인 의료 데이터 활용 및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 (모빌리티 공약) 자동차보험에 관한 정책공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언급되고 있음
- 금융산업 관련 정책공약 키워드에도 자동차보험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 부분과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 나타난 키워드에 '미래차', '자율주행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가 명시되어 있음



CEO Brief

- (모빌리티와 보험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며, 이에 대한 이슈 제기가 가능할 것임
 - 그림자 규제 철폐 및 보험금 원가를 반영한 보험료 책정과 같은 정책 방향은 자동차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경상환자 보상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해 급수 조정,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철폐 등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 합리화, 상해 입증 등 경상환자 치료 프로세스 확립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금융 공약)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등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안정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및 관련 산업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을 제시함
 - 빅테크의 금융업 영위 시 동일기능·동일규제 기본원칙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고,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함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을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확대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자산공개) 허용·NFT 활성화·메타버스 산업 국가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함
- (디지털 금융과 보험산업)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빅테크를 모회사로 한 디지털 보험회사 설립, 빅테크의 보험상품 판매시장 진입 등 빅테크의 보험상품 제조 및 판매(중개) 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
 - 가상자산 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신사업 발굴, 가상자산 직접 투자 및 관련 기업을 통한 간접 투자 등 대체투자처 모색 등 보험산업에서 가상자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등이 제시됨
 -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주기적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요소를 점검할 계획임
 -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함
-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보험산업은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CEO Brief

-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시장기능 중심 철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 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조정 대상 적합성 여부나 분쟁조정 신청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원해결에 있어서 금감원의 기능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하게 하고,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강성호·정성희·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황인창·변혜원·김세중 연구위원
sjkim@kiri.or.kr